납치 일본인 문제에 나타난 일본의 민족주의 고찰

박성황*

Ⅰ. 들어가며
Ⅱ. 일본 민족주의와 납치 일본인 문제
Ⅲ. 위안부 문제와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
Ⅳ. 나오며

주제어: 납치, 납치(자) 문제, 위안부 문제, 민족주의, 일본외교, 패러다임전환

| 국문초록 |

2018년 들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일본은 '재팬패싱'을 의식하면서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왜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동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은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납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생존자를 귀환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 따라서 향후 문제 해결의 주요 행위자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경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일본의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납치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만 볼 경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북일 양국의 나름대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동 문제 해결과정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문제의 장기화 원인을 크게 일본 민족주의의 세력화와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구분하여 살펴봄과 함께 위안부 문제와 비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8.12.23.2.67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납치 일본인 문제와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북일관계 혹은 한일관계 사안으로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납치 일본인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차이점도 많지만 유사한 점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에서는 피해자로서 강력히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위안부 문제에서는 가해자로서 문제를 조급히 무마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납치 문제는 크게 확대시키면서 위안부 문제는 축소 내지는 완전 종결시키고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무엇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 들어가며

2017년의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자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 계기 평화분위기 조성 시나리오를 실행하였고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어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여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중개하였으며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개최되고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되어 북한 비핵화라는 성과를 거양토록 하기 위해 당사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도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11월 29일까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중국은 사드 보복 공갈로, 미국은 대북한 군사옵션 공갈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매우 긴박한 상황까지 조성되면서 "한국패싱"이란 단어가 유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들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주변외교를 전개하여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됨에 따라 이제는 "일본패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를 꺼내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동 문제를 북한 측에 거론해 주도록 언급하고 있다. 주변강국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납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납치 문제는 북한과 일본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상투

적 제스처인가 아니면 절박성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북한은 1970~80년대에 공작원들을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일본 또는 한국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일본인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인을 강제로 납치하여 일본어 및 일본 현지사정을 북한 공작원에게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목적과 행동 하에 파생된 사건을 납치 일본인 문제라고 정의해 둔다. 납치 피해자와 관련 일본 측 주장은 총 17명이고 북한 측 주장은 13명이다. 이 중 8명은 사망(북한 측 주장)하였고 5명은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일본은 남은 12명의 사망원인, 사망확인서 등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1)]

1970년대부터 발생한 동 문제는 2000년부터 본격 거론되어 20여 년이 흘렀다. 사건 발생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알려지고 나서도 문제 해결이 쉽게 결론지어지지 않고 있다. 동 문제는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글에서는 납치 문제가 당연히 북한의 원죄를 전제로 하면서도 거론된 지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최근 한국의 긴장완화 무드에 어울리지 않게 제기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도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강력한 우익세력, 엄밀히 말하면 민족주의 세력이 있다.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익이란 용어보다는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칭한다.[2)]

현대 사상가인 하시카와 분소(橋川文三)는 일본이 개항 이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적 정치형태의 이념으로 집약되어가는 과정은 인종 중심적(Ethnocentric)인 내셔널리즘 혹은 단순한 인종주의(Racism)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은 이미 막부(幕府) 말기에 매우 고도로 세련된 사상을 갖게 되었고 역사적·

1)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とは?" http://www.rachi.gp.jp/ (검색일: 2018년 11월 25일).

2) 우익과 민족주의의 구분에 대해서는 박성황, "일본정치에 있어 우익과 민족주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소고: 한국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제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문화지리학적으로 일본인종은 우수하며 신체골격의 구조 등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3)]

여기서 나오는 인종 중심적(Ethnocentric)이란 용어에 대해 시오카와 노부아키(鹽川伸明)는 "혈연 내지 선조·언어·종교·생활·관습·문화 등에 입각한 에스니시티(Ethnicity)로서 이를 확대하면 <민족>이 된다"고 언급하였다.[4)]

한편, 민속학자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國男)는 일본인은 죽어도 그 영혼이 일본에 남아 있다는 영혼관이 존재한다며 일본인의 의식구조 및 사상세계를 영혼관과 강력히 결부시켜 설명하였다.[5)]

이상 橋川文三와 鹽川伸明 및 柳田國男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본의 근대 이후 사상은 과거와 현재가 조상과 후손이라는 영혼관의 개념으로 시간적 일체성이 유지되고 일본열도라는 섬나라의 한정된 공간에서 공간적 개념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유일무이의 일본민족에게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選民사상에 바탕을 두고 민족을 보전하며 발전시키는 정신, 즉 <민족주의>라는 흐름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스스로 내셔널리즘을 신봉하고 자신을 내셔널리스트라고 한다. 서양의 용어인 내셔널리즘은 동양에서는 국가주의, 국민주의, 민족주의로 구분되어 해석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민족주의가 보다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6)] 이렇게 용어의 의미를 좁혀갈 경우 결국 아베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 세력의 아이콘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7월에 자신이 처음으로 단독 저술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國へ)』 책자를 출간하였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셔널리즘이란 용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본문에서 내셔널리즘

3) 橋川文三, 『ナショナリズム－その神話と理論』 (東京: ちくま學藝文庫, 2015), pp. 165-206.

4) 鹽川伸明, 『民族とネイション－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難問』 (東京: 岩波新書, 2015), pp. 3-9.

5) 安丸良夫, 『現代日本思想論－歷史認識とイデオロギ』 (東京: 岩波書店, 2012), pp. 69-72.

6) 네이션(nation)이 한자문화권(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국가·국민·민족 등으로 해석되듯이 내셔널리즘도 국민주의·국가주의·민족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정영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국가주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입장과 이익 및 통일성을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주권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절대주의와 대치되는 정치사상이다. 한편 한자문화권에서 민족주의는 시민권을 기준으로 멤버십을 규정하지 않고 민족적 소속에 따라 규정한다. 즉 에스닉(ethnic) 멤버십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된 민족주의 개념은 이 점에서 분명히 서구 근대의 네이션이나 내셔널리즘과 차이가 있다." 정영훈 외, 『한국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서울: 한국학중앙 연구원출판부, 2014), pp. 21-24.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인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내셔널리즘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7]

한편 동 책자에는 아래와 같이 투쟁적인 문구도 보인다.

"나는 정치가를 이런 시각으로 구분한다. <싸우는 정치가>와 <싸우지 않는 정치가>. <싸우는 정치가>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정치가를 말한다. <싸우지 않는 정치가>란 <당신이 말한 것은 옳다>고 동조는 하지만 결코 비판의 대상은 되지 않으려는 정치가이다. 나는 <싸우는 정치가>이길 바란다"[8]

상기 두 종류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아베 총리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내셔널리즘을 자신의 정치적 신조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셔널리즘을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싸워 나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내셔널리즘은 상기 지적대로 곧바로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민족주의 세력은 전후 미군정하에서는 2차 대전 가해국과 침략국가라는 멍에를 의식하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70~80년대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2위에 달하고 냉전시대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방지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받아 나름대로의 입지를 확보하여 1990년대 들어 서서히 외부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 세력들이 21세기 들어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보란 듯이 내놓고 세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납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동 문제가 북일 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21세기 들어서부터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북일관계의 변수로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북일 간 제반 문제와의 관계에 입각하여 전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납치 문제만을 단독으로 연구 주제로 삼는 경우는 손영주(2007), 이종국(2008), 임상순(2013), 이기완(2014), 미야모토 사토루(2016), 이

7) 安倍晋三,『美しい國へ』(東京: 文藝春秋, 2006), pp. 97-99.
8) 安倍晋三,『美しい國へ』(東京: 文藝春秋, 2006), pp. 3-4.

수익(2017)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들 논문도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간의 주요 협상 내용이나 일본 내 동향을 당시 시대환경과 외교·정치공학적인 관계에 입각해서 분석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납치 문제가 왜 장기간 미해결되고 있는가와 미해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당시 일본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동 시대의 주요 이슈인 납치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기타 문제를 비교한 논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3월 7일 일본 국회의사당 중의원 회관에서 일본 내 소수파를 대변하는 중앙대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강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납치 문제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단순 비교하였을 뿐이다.[9]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이 납치 문제를 기화로 종래의 인권 탄압국에서 인권 피해국으로 외교 패러다임을 변환시킨다는 주장(손영주 2007; 이기완 2014)[10]과 이 같은 일련의 일본 정부의 대응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납치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임상순 2013)이 눈에 띌 정도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 같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납치 문제 미해결 장기화의 근본 원인과 일본사회 내 동 문제를 보는 시각과 입장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정치가들의 행동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와 대응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수면하에서 일본 정치가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납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생존자를 귀환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이미 취한 북한 측보다는 동 문제의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종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요 행위자 일본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9) 요시미 요시아키, "구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略取와 북한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똑같은 반인륜적 범죄다," 『한국논단』 2007년 5월호, pp. 76-77.

10) 이기완, " '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의 배경," 『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 (2014), pp. 163-164.

II. 일본 민족주의와 납치 일본인 문제

1. 납치 문제의 왜곡과 장기화

북한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13명의 납치 일본인 중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생존하였다고 발표하고 이후 생존자 5명은 일본으로 귀환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북한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혹시 북한지역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를 더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 동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곳곳을 일본 관계자가 직접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면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자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동 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북한의 각종 시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일본의 주장에 특별한 대응논리를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고 사망자 조사결과가 분명하지 않고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 문제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자 관련내용이 부정확하다. 사망일시가 부정확하고 사망원인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등 북한의 자료에 신빙성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동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4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백지상태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하여 고이즈미 총리가 식량 25톤과 1,000만 달러 상당의 의료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과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실무협의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었다.[11] 셋째, 북한 내 조사활동을 희망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신뢰할만한 보장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13명의 대상자 중

11) 外務省, "日朝政府間協議(12月24-25日, 於: 北京)(概要)," http://www.mofa.go.jp/mofaj/area/n-korea/abd/seifukan_0512 (검색일: 2018년 11월 22일).

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불법적, 반인륜적인 사건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북한이 8명 사망이외 더 많은 납치 일본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은 과연 생존자를 지금까지 은폐하면서 일본에 거짓으로 8명만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것일까? 이런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북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2년 김정일 시대의 경제상황과 북일관계 등은 이렇다. 당시 북한은 2002년 7월에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였는데 동 조치는 북한이 침체되고 고립되어가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의 원조금을 활용하여 기초경제를 보강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도 점진적인 개방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북한개조'를 위한 거대하고 획기적인 플랜이었다. 여기서 외부의 원조금 조달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보상금을 받아 이를 북한 내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플랜이었다. 한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상 북한은 일본인을 불법 납치했다는 천인공노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납치한 일본인들이 북한 내에서 8명이나 사망하였다는 사실도 동시에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납치 일본인 8명 사망, 5명 생존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기타 생존자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을까 하는 문제이다.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동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납치 일본인이 북한에서 사망하였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었지 몇 명이 사망하였는지와 몇 명이 생존하였는지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생존자를 고의로 은폐하면서까지 과거를 사죄하였겠느냐는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는 생존자를 일부 은폐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북한은 8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과거 북한의 행태에 대한 피치 못할 비난을 예상하고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데 왜 생존자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겠는가를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유해 처리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또한 정보 인프라 부족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생존자가 어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을 확대하여 북한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고 사건자체를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한 부분마저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 또한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과 일본의 사건 처리과정에 양비론(兩非論)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과 일본의 문제 해결 방식 모두에 합리적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미해결 장기화 요인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일본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양복에 파란 휘장을 부착하고 다닌다. 파란 휘장을 부착하고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파란 휘장의 의미는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생각을 잊지 말자는 의미이다. 일본사회에서는 매우 애국적인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국내에서는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이후 십여 년간 일본의 전 매스컴이 하나가 되어 매일 납치 일본인 문제를 보도하였고 각종 심층취재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방영하였다. 이런 결과 일본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납치 문제가 최고로 많고(2016년의 경우 81.2%), 핵(72.1%), 미사일(71.5%), 정치체제(42.1%)순이었다.[12]

그럼 왜 일본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납치 일본인 문제가 거론되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동 문제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일본 정치인들이 납치 일본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 문제의 장기화 원인을 크게 대내적 요인과

12)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 『外交に關する世論調査』(東京: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 2016), http://www8.cao.go.jp/survey/index.html (검색일: 2018년 11월 23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대내적 요인으로는 북한과 일본의 인식 차이와 일본 민족주의의 개입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고 대외적 요인으로는 외무성의 위상 저하와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1) 대내적 요인

(1) 북한과 일본의 인식 및 투명성 기준 차이

일본은 2002년 북한 발표 이후 17년 이상 줄곧 납치 일본인의 사망원인 규명 과정에서 북한이 석연치 않은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런 북한의 엉터리 진상조사 결과로 유추하여 틀림없이 생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 40~50년 전 사건의 진상조사이다. 북한은 지금 아프리카국가와 같은 수준인 2천 달러 소득의 빈민국가이다. 의료시설과 각종 사회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시스템도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호구지책이 최우선인 국가에서 과거의 의료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였을 리가 만무하며, 납치 일본인의 과거자료를 온존시키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사망한 납치 일본인들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금 일본은 4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이고 첨단 과학시설과 의료시설, 사회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이런 사회 환경에 걸맞은 '기록과 보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실제 일본은 일상생활 및 생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기록과 보존이 완벽한 국가이며,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마인드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본적 사고방식과 수준으로 북한에게 완벽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빈민 국가이면서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망자 병원 치료기록, 사망 당시 증언 기록, 사망자 매장시설 관리 등 각종 자료의 보관 필요성은 북한주민 자신과 가족들의 당장 먹거리와 내일의 먹거리 확보라는 생계 최우선의 마인드와 비교해보면 사치스런 과정일 수가 있다. 이런

북한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40~50년 전의 온전한 수사기록과 의료기록을 요구하는 일본이다.

어떤 면에서 북한은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판단 미스였다. 일본인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과학적 마인드와 사건에 대한 투명성 기준은 물론, 일본 민족에 대한 높은 자존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에 눈이 어두워 일본 정부 및 사회단체들의 전략과 페이스에 말린 것이다.

⑵ 일본 민족주의의 개입

납치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일본이 진정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북한의 실태를 모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까지 자세로 보아 일본을 완전히 기만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생존자를 귀환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왜 북한의 이런 납치 문제 대응태도를 크게 문제삼아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의 이런 철저한 검증자세는 결국 북한의 재조사 의지를 꺾고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는 퇴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태도를 냉정하고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 의외로 납치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I절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일본인은 고립된 섬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세계 어느 국가에 못지않게 민족 개념이 강하고 집단주의적 성격이 남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토양에서 볼 때 일본인을 납치한 사건은 일본 민족주의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일본 민족주의 세력들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였고 동 문제를 계기로 강한 결집력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동 문제를 민족주의 세력 결집을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고 동 문제를 교묘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전략적 이용의 선봉장이 아베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다.[13] 당시

13) 아베 총리가 소속해 있는 국회 및 사회 연구단체는 '모두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납치 문제를 담당하던 아베 부장관은 납치 일본인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동 문제를 민족주의 세력의 확장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의도 하에 북일 간 외교적 합의사항인 납치피해 생존자의 일시 일본귀환을 파기하고 영구귀환토록 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관철시키는가 하면 완벽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만이 필요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동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은 5명 생존자에 대해 절차를 밟아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민족주의 세력들은 북한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들의 신변안전 보호라는 이유로 2주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교적 약속을 파기하고 일시 귀국 중인 이들을 영주 귀국시켜 버린 것이다. 동 문제 협의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들의 비협조는 비단 영주귀국 건만이 아니다. 아베 당시 관방부장관은 양국 외무당국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평양선언 파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베를 중심으로 한 '압력파'는 2차 북일정상회담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하여 일본이 압력을 선택하게 만들었다.[14] 심지어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의 딸 김은경과 할아버지인 요코다 시게루(横田慈)의 접촉주선을 견제[15]하는가 하면 사망자 진상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북한 측의 미스를 확인하고 이를 비난하며 북한 측의 진상조사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일본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 민족주의 세력들의 납치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견제 내용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이즈미 정권 후반기부터 현재의 아베 5차 정권 기간까지 납치 문제는 단일사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핵·미사일 문제, 북일수교 문제와 삼 점 세트로 보고 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이 과정에서 삼 점 세트가 서로 얽히면서 해결의 방법이 복잡하게 되었다.

모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올바른 일본을 만드는 모임', '가치관 외교를 추진하는 의원모임',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등으로 모두 역사 문제와 일본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단체이며 여기서 아베 총리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14) 『讀賣新聞』, 2004년 11월 30일.

15) 2014년 3월 울란바토르에서 납치 희생자인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의 부모와 요코다 메구미의 친딸 김은경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박정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일본공간』 제19호 (2016), p. 107.

16) 신정화,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 『일본연구논총』 제38호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부상한 '북한 위협론'에 납치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핵·미사일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납치 문제만을 해결해도 결국 일본과의 교섭에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특히 삼 점 세트 중 일부인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일본과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미북 간의 협상결과에 의한 측면도 상당 부분 존재하여 문제 해결이 중층적으로 얽히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들이 더욱 일본 국내 여론을 악화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간 것이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 집권 후반기부터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대북강경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2004년 11월 30일 중의원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아베 정권이 발족하여 2006년 9월 내각 출범과 더불어 납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구심체로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발족시킨 바 있다. '총력대응'의 태세를 보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대응 방식은 대북 강경정책 일변도였다.[17] 동 대책본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임무는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강연회 및 집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지방국민모임'을 주최하였으며 책자 및 기타 콘텐츠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18] 납치문제대책본부는 2014년의 경우 8차례나 개최되었다. 관계부처는 내각관방과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등이다. 각 분야 관료조직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납치문제대책본부이며 여기에는 총리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19]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인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당연히 절대적이었으며 관계부처는 경쟁적으로 대북 강경성향으로 동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

(2013), p. 295.

17) 박정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일본공간』 제19호 (2016), p. 106.

18) 拉致問題對策本部,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東京: 拉致問題對策本部事務局, 2013), p. 8;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p. 51.

19) 미야모토 사토루, "스톡홀름 합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원주의 모델에서 본 대북정책 결정," 『일본공간』 제19호 (2016), pp. 143-144.

진 납치사실 폭로활동과 대북 제재 위주의 방향으로 진행되어간 것이다.

셋째, 일본 정부 및 관련단체가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을 시급히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납치피해자가족회와 '구하는 회(救い會,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회)'는 민족주의 세력들의 압력을 받아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이 메구미의 사망을 가정하여 언급한 데 대하여 반발하였고, 요코다 메구미 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발표하지 않은 채 조사활동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

2003년 1월 26일 납치피해자가족회의 대표인 '요코다 시게루'는 자신의 딸인 '요코다 메구미'는 사망했으나 손녀는 생존해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희망한다고 의사표시한 데 대해 납치피해자가족회는 반대를 표명했다. 만약 그를 지원하여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납치 문제로 더 이상 북한을 추궁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20] 일본 정부는 帝京大學 의학부 강사 요시이 토미오(吉井富夫)의 감정결과를 수용하여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라며 북한 측이 제공한 유골이 실제 타인의 유골이라고 주장하여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근거로 하는 유골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1) 동 유골 일부를 같이 조사한 일본과학경찰연구소는 판정불가능이라고 결론지었다. (2) 2005년 2월 2일 <NATURE>지가 문제를 지적하였다. (3) 화장된 유골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DNA가 남아 검출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4) 吉井는 화장유골 감정이 처음이었다. (5) 다시 시험할 유골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21][22]

또 하나의 구체적 사례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1월 8일 동아일보는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 배경을 놓고 일본 정부(납치문제 대책본부)가 최성용 한국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공동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였다. 또한 동 관방장관은 요코다 메구미가 과다한 약물 투여로 사망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20)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 일본여론의 대북인식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7), pp. 28-29.

21) http://www.bio.uio.no./bot/ascomycets/PCR.trobleshooting.html#anchor654323 (검색일: 2018년 11월 23일).

22) 연합뉴스는 2005년 3월 9일 <네이처>지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최성용 대표가 납치문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사망원인 조사에 참여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23]

여기서 일본 정부가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력 피하는 이유를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상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정해보면 된다. 요코다 메구미는 피납 일본인 중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다. 납치 당시 17세의 여중생이었으며, 거주하는 동네 부근에서 북한공작원에게 납치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横田早紀江)' 여사는 일본 전국을 돌며 모성애를 바탕으로 메구미를 귀환시켜달라고 호소해왔다. '동네에서 납치된 여중생의 귀환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는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요코다 메구미는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일본에서는 북한 측의 진상조사내용에 의문점들이 도출되어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지속적으로 생존을 가정하여 피납자의 생환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요코다 메구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서가 확인되면 일시적으로 반북(反北)기운이 고조되고 북한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 비난이 거세질 것이나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태가 진정되고 납치 일본인 문제 자체가 서서히 종결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망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피납자 생환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생환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요구하는 조건 세 가지(피납자 생환, 진상규명, 관계자 처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소멸되기 때문이다.[24]

---

23) 『동아일보』, 2014년 11월 8일 자 보도내용.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横田惠)의 사망배경을 놓고 최성용 납북자가족 대표와 공동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4)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은 부수적인 조건이다. 피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진상규명은 사망한 내용을 토대로 규명하면 되는 것이고 관계자 처벌은 북한 측에서 관계자를 설득하여 일본에 인도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피납자가 사망했다면 동 납치 일본인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게 된다. 어찌 보면 일본 정부로서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사죄를 받아냈고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냈으며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동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다. 일본은 납치 일본인 문제는 종결시키고 북한과 보다 높은 차원의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살펴볼 때 일본에는 납치 일본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일본 정부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납치 일본인 문제를 장기화하려는 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들과도 강하게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 세력들은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분노와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어 동 문제를 민족주의 세력의 활성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민족주의 세력들은 북한이 외국인을 공작원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납치하였다는 원죄를 집요하게 추궁하여 일본의 민족주의 세력 규합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동 문제의 조속한 해결보다는 최대한의 이용과 완벽한 수준의 해결방법만이 정답이다. 일본 국내 여론화는 물론 외교 문제로 부상시키고 북한 제재 문제로 연계시키며 조총련에 대한 탄압 문제로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북한의 납치사건 고백과 사죄(2002년) 이후 북일관계는 악화일로이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 민족주의 세력들의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는 동 진상조사과정을 신속히 종료시키고 다음 협상단계로 진척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덜미를 잡았고, 결국 북일 양국관계가 오히려 악화되어 교착상태가 되어버렸다. 2천 달러 소득 국가이면서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가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완벽한 증명이 가능한 정보인프라 확인작업을 일본 측은 알면서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일본 관계자가 북한 전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요구와 40~50년 전의 매장시설 기록을 제출하라는 일본의 요구가 북한의 입장에서 가능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평양선언의 취지와는 아랑곳없이 집요하게 북한 측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만을 요구하는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대외적 요인

민족주의 세력들의 납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장기화 전략은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모든 외교 무대에서 동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하였다.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최우선으로 취급하고자 한 것이다. 심지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에서도 납치 일본인 문제를 적극 거론하여 미국을 제외한 4개

국 대표들로부터 견제를 받은 바 있다.[25] 물론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여 집요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6자회담에서도 일시적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가 보조 회담의제로 토의된 적이 있다. 백 번 양보하여 6자회담은 북한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가 회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일본은 왜 납치 일본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각종 국제사회 회의석상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아프리카 국제회의에서도 동 문제를 거론하여 일본은 각국으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일본으로부터 OECD 원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본에게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각국 원수를 접견하는 좌석에서도 동 문제를 거론하여 일단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최근에도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가을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피해자 가족 17명을 모두 상봉시키면서 동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기서는 납치 문제 해결 난망과 장기화의 대외적 요인으로 크게 외무성의 위상 저하와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외무성의 위상 저하

2000년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설 때는 외무성이 북일관계를 주도적으로 리드했다. 물론 납치 문제도 그중의 하나였다. 일본 외무성은 '전후 총결산'이라는 일본 외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하여 동북아시아 외교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북일 수교를 목표로 하였다. 영국이 유럽과 미국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유럽 외교 주도권을 행사하였듯이 일본도 미국과 북한을 중개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외교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전략 아래 북일 수교 문제에 접근한 것이었다. 고이즈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25) 6자회담에서 납치 문제 등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과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충고를 받기도 하였다.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pp. 56-57. 한편, 6자회담에서 중국 측으로부터도 납치 문제를 의제로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高崎宗司, 『檢證 日朝交涉』 (東京: 平凡社新書, 2004), p. 204.

안전보장 특히 지역의 긴장완화였다.[26] 더불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추진한 외무성의 다나타 히토시(田中均) 아주국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기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라는 인식하에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27] 특히 납치 문제로 얽혀 있는 북일관계를 풀기 위해 다나카 국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특명을 받아 십수 차례 북한 측 파트너인 "미스터 X"와 접촉하였다. 하지만 외무성의 이런 접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이 아베 관방부장관이었다. 아베 관방부장관은 납치피해 생존자의 영구 귀국을 절차 없이 추진해버렸고 고이즈미 총리가 심혈을 기울인 평양선언 파기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베 관방부장관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들은 북한의 진상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철저히 검증하여 일본 외무성을 비난하는가 하면 납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외무성의 위상을 약화시켜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다나카 아주국장은 자택이 방화되는[28] 등 테러의 대상이 되었고 고이즈미의 외교는 납치 피해자 전원을 귀국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굴욕외교'로 평가되기까지 하였다.[29] 결국 아베 자신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발족되고, 북한과의 협의에서 외무성에 대한 내각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30] 외무성은 북한과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기관이 아닌 단지 대책본부의 결정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약화되어버린 것이다.

⑵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민족주의 세력들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내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 문제 해결을 빌미로 국제사회에서의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동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은 북일 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국제사회에 호소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외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26) 北岡伸一, "戰後日本外交史に殘る成功である," 『中央公論』 2002年 11月.
27) 田中均 · 田原總一郎, 『國家と外交』 (東京: 講談社, 2005), pp. 25-50.
28) 田中均, 『外交の力』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9), pp. 138-139.
29) 荒木和博, "屈辱外交に<ノー. コイズミ>を," 『月刊諸君』 第36卷7號 (2004), p. 214.
30) 미야모토 사토루, "스톡홀름 합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원주의 모델에서 본 대북정책 결정," 『일본공간』 제19호 (2016), p. 144.

되었다. 국제사회에 대하여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였고 일본은 그 피해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인식시켜 2차 대전의 침략국가, 가해국가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동 문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미지를 180도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정치인들의 양복에는 파란 휘장이 붙어 있는 것이다. 납치 일본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프리카국제회의에서 동 문제를 거론하는 일본 외교관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 동 문제를 장기화시키면서 거론할수록 일본은 피해국가의 이미지를 굳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교협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자국을 종래의 인권 탄압국에서 인권 피해국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북일 교섭에서 북한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으며[31] 미국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우방국들에도 각종 국제무대에서 동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취급하려 노력하였다. 일본대표는 2003년 11월 제 1차 회의 기조연설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이 핵 문제 해결에 근거하여 경제적 협력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32] 결국 2007년 2월 성과문서에서 북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분과 설치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시하는 데 납치 문제가 현안 사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다자간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G7 정상회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등 다국 간 회의를 통해 납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33] 2013년 6월 18일

---

31) 이기완, "'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의 배경," 『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 (2014), pp. 163-164.

32)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p. 57. 2007년 2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언급.

33) 平成28年度 拉致問題の解決その他 北朝鮮當局による人權侵害問題への對處に關する政府の取組についての, http://www.rachi.go.jp/jp/shisei/houkoku/index.html (검색일: 2018년 11월 25일).

G8정상회의의 공동성명(G8 Lough Erne 2013')에서는 북한 정부를 향하여 국제공동체의 관심사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34] 한편 2015년 EU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상황 결의>를 유엔총회에 제출하여 2016년 3월 채택시킨 사례도 대표적이다.[35]

3. 납치 문제 해결 장애요인으로서의 민족주의

이상 살펴본 납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주요 관련 동향을 근거로 향후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 측의 문제이다.

첫째,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문제를 결단하여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층은 일본 측의 해결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떤 조치도 일본 측에게 또 다른 트집거리를 제공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북한 측에서 그동안 조사방법의 착오를 인정하고 북한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예를 들어 생존자의 존재사실이 나오는 경우도 포함) 이를 일본 측에 솔직하게 설명한다 해도 일본 측은 또다시 북한의 모든 발표내용을 검토하여 조그만 의심이 있으면 이를 구실로 북한 발표내용 전체를 다시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현재 조사방법과 문제 해결 접근방법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조사결과도 중요시하지만 조사과정에서의 투

34)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p. 42.

35) 신정화, "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일본공간』 제19호 (2016), p. 189.

명성을 중요시한다.[36] 그런데 북한의 현재 정보 인프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과학적·실증적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투명성 기준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폐쇄국가로서 북한 전역에 핵과 미사일, 생화학을 비롯한 각종 군사무기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납치 문제 생존자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북한의 어느 지역도 일본 관계자가 방문하여 관련 자료와 시설을 철저히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 관계자의 요구대로 북한의 모든 지역을 개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번에는 일본 측의 문제이다.

첫째,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은 납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37]을 고수하면서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절차는 일본이 제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 세력들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법을 주장하는 어떤 세력들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가 새로운 대체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은 납치 문제도 '북한위협론'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강경정책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열도 방향으로 발사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위협론'이 대두되었다. 납치 문제는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일본 내 '북한위협론'의 원인제공의 요소로 부상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방법인 대북강경론이 지배적인 해결책이 되었다. 핵·미사일 문제로 유발된 '북한위협론'을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은 납치 문제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위협론'은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군사대국 일본건설이라

36) 박정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일본공간』 제19호 (2016), p. 119.

37) 이기태,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4호 (2016), p. 153.

는 보수·우익 정치 세력의 국가목표가 대내외의 커다란 저항 없이 실현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제로 활용되었다.[38] 여기서 보수·우익 정치 세력은 바로 민족주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족주의 세력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은 동 문제로 인한 민족주의 세력 규합 및 외교 패러다임 전환 등 부수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의 납치사실 확인 이후 17년 동안 일본은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규합되어 5차에 걸친 아베 정권을 발족시켰고[39] 동 문제를 일본외교 패러다임 전환의 기제로 삼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피해 국가 이미지를 굳혀가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제라고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내심 선거 전략 내지 중장기적 수교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40]

이상 북일 양국의 장애요소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핵심 공통사항은 일본 민족주의 세력들의 주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진정으로 동 문제 해결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들이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는 해결이 난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엄격한 국제여론과의 형평성, 일본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 견제 등의 문제점도 추가적으로 있으나, 어느 요소이건 민족주의 요소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내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일본이 북동아시아 외교에서 서서히 배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부

38)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북한연구학회보』제12권 제2호 (2008), p. 158.

39) 2002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북한 문제 즉 납치 일본인 문제와 핵·미사일 위협을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았으며 결과적으로 자민당이 대승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 22일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도에서 북핵 문제가 16%를 차지하여 소비세(29%), 헌법(23%)에 이어 세 번째 중요한 이슈였다. 또한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높았다.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外交に關する世論調査』(東京: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 2013).

40) 이기완,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국제정치연구』제19집 제2호 (2016), p. 196.

정적인 반북정서를 완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III. 위안부 문제와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

지금까지는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민족주의 세력들의 관여와 활동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민족주의 성향이 농후하고 역시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여타 사안들을 참고해 보고자 한다. 한일, 그리고 북일관계에서 일본의 민족주의 성향이 반영되어 갈등을 지속해온 외교사안으로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와 위안부 문제이다.

우선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적십자회, 정당, 일본 언론, 저명인들이 전 국가적으로 동원되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93,344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다. 일본은 인도적 귀국이라고 하지만 이들 재일교포의 98%는 출신지가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과 남한은 왕래가 되지 않고 있던 당시였다.

또한 한국 정부와 재일거류민단(民團)에서는 결사적으로 동 북송사업을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2년부터 북송교포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수없이 책자화되어 발간되는데도 일본 정부는 1984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일본은 북송교포들에 대한 비참상이 일본사회 내 전파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들을 1984년까지 북송시킨 것이다. 징병·징용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겨우 일본사회에서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재일교포들에 대하여 추진한 일본의 북송사업은 납치 일본인 문제가 일어났던 1970~80년대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을 내세워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이 북한으로 보낸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의 코멘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북송사업을 분석할 경우, 결국 동 사업은 일본이 이민족에 대해 보여주는 배타

적 민족주의의 사례였던 것이다.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와 지방참정권 반대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는 납치 문제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납치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 본다.

위안부 문제와 납치 문제의 상관성은 학문적 시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박명희는 <일본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회구조>에서 일본 주요 일간지의 위안부 문제 보도횟수 추이 통계를 제시하였다.[41] 위안부 문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보도횟수가 연평균 197회였으나 2002년 이후 2011년까지는 연평균 66회로서 거의 1/3에 가깝다. 물론, 일본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도횟수로서 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동 횟수 비교로 납치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2]

일본 정부도 두 문제를 연관시킨 적이 있다. 한국 측이 제기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자국도 심각한 인권 피해국이었다며 맞불작전을 전개한 적이 있다.[43]

위안부 문제에도 민족주의 세력들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비롯하여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언론인, 니시오카 츠도무(西岡力) 교수, 야마모토 유미코(山本由美子) 나데시코 액션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은 납치 일본인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내셔널리즘의 어법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내셔널리즘 어법이란 고노담화에서 주장하는 성노예제, 법적책임, 전쟁범죄의 성담론을 상행위, 도의적 책임, 전쟁의 성담론으로 변환시켜 일본과 일본민족의 탈주체화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

41) 박명희, "일본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회구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2호 (2014).

42) 박성황, 『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2016), pp. 191-192.

43) 김준섭,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제1호 (2007), pp. 147-149.

다.[44] 이들은 또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나 역사사실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분게슌쥬(文藝春秋)>, <쇼쿤(諸君)>, 산케이신문 등에 게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확산시키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과거를 끄집어내어 시시비비를 밝히는 피치 못할 과정을 안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수치스런 과거 역사의 패러다임을 더 이상 인식시키지 않고자 한다. 또한 일본은 동 문제가 2차 대전 침략국이라는 트라우마와 '성폭력'이라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성이 포함되어 있어 한시라도 급히 탈출구를 찾고자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정상적인 해결방법보다는 변칙적인 해결방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 일본이 변칙적인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합리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간 조인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아베 정권은 총리의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 보류를 검토한다고 운을 떼었다.[45] 순수한 올림픽 정신에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위안부 문제와 아베 총리의 올림픽 개막식 참가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일본의 부분적인 대응태도와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반도 주요 정책 비교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2000년 이후 일본사회에서 대표적 한반도 관련 이슈인 납치 일본인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비교하는 차원이다.

II절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집요한 부분을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도 납치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형국이다(일본은 납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북한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아베 정권은 2015년 12월의 합의로 동 문제를 완전히 덮고자 하는 것이다.

---

44) 이지영, "일본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5호 (2013), pp. 412-423.

45) 『조선일보』, 2017년 12월 30일.

물론 납치 일본인 문제는 전쟁기간이 아닌 평시에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외국의 선량한 국민을 강제 납치한 불법적·폭력적 성격이 자명하고, 위안부 문제는 전쟁기간 중에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며 일본과 특수한 관계(식민지)에 있는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부분적 계약관계 내지는 강제적 관계를 전제한 사건이므로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북일 양국이 국가 공권력을 직·간접으로 관여시켰다는 점과 진실규명이 가해국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표 1〉 납치 일본인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비교

구분	납치 일본인 문제	군대위안부 문제
발생 시기	1970~80년대 * 평시	2차 대전 중 * 전시
피해자 규모	10~20여 명 전후 (일본과 북한의 견해차 있음)	수백 명~수만 명 규모? (일본과 여타 국가의 견해차 있음)
피해 국가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등 10여 개국
가해 국가	북한	일본
문제점	강제납치, 인권유린, 주거제한	인권유린, 성폭력, 주거제한 (납치의 강제성은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생존자(증인) 여부	10여 명 이내 (생존자의 연령대가 주로 50대~60대로서 자연사 가능성은 별무)	27명(18년 11월 현재) (생존자가 대부분 80대~90대로서 매년 사망하고 있으며 수년 내 생존자가 전무할 가능성)
국가 개입 여부	국가 개입 (김정일이 정식으로 인정)	고노 관방장관이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베 총리가 이를 부인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관련내용에 대해 침묵
사죄 여부	사죄 (김정일이 정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고노 관방장관 담화로 사죄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번복하여 인정)
재조사 의지	북한은 부분적으로 재조사 의지를 표시	일본은 재조사 의지가 전무 (일본의 관공서를 정밀조사할 경우 관련 서류 발견 가능성 농후)
국제 여론	재조사를 희망	재조사를 희망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유사하여 비교해 볼 부분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인의 인권을 강제로 유린한 것이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해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결의지를 보이는가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유사점은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이며 국가단위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시기와 방법이 다르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였는데 일본은 이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고 또 다시 인정하여 일본이 진정성 있게 인정하였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재조사 의지를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재조사 의지를 전연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식민지 지배의 살아있는 증인인 할머니들이 대부분 90대에 접어들어 수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아직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납치 일본인 문제와 관련 국제무대에서 가해국인 북한을 맹비난해왔다. 자국의 국민이 평시에 강제납치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국 정부로서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하지만 자국이 행한 과거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관련사실을 철저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해당 관공서를 철저히 조사한다면 일본이 군대 위안부를 국가 단위로 동원하였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1차 조사결과를 맹비난하고 일본 관계자가 직접 조사에 투입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식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과거의 사죄(고노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연히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온다.[46]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재조사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합의를 한국 측이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일본은 동 합의에서 1mm도 양보할 수 없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언함은 물론, 동 문제를

46) 박성황, 『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2016), pp. 193-194.

한일 간 지혜를 모아 해결한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였으나[47] 미국의 거센 압력으로 마지못해 수긍하거나 침묵하였다.[48] 이런 아베 총리가 2015년 12월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임시방편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 2016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한일 외무당국은 2015년 12월 28일에 행한 한일 외무장관회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 확인되고 이후 한일 정상 전화회담에서는 그 합의를 재차 확인하고 평가했다. 또한 한일 양 정상은 금번 합의를 양 정상이 책임지고 실시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에 이 합의정신에 근거하여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되어 있다.[49] 하지만 동 합의는 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원점[50]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되었는데 아베 정권은 동 문제를 상기 합의에 근거하여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IV. 나오며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4일 몽골에서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이 북한의 김용국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소장과 접촉을 하였다. 일본이 진정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비밀접촉을 지속하거나 한국과 미국에 분위기 조성을 요구한다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일본이 만약 북동아 외교에서 '재팬패싱'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납치 일본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번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북일협상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동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47)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소위 '3대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밝혀왔다(3대 담화는 미야자와 담화(1982년),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말한다). 이인호,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2호 (2015), p. 78.

48) 아베 총리는 2014년 3월 국회답변을 통해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고 2015년 4월 방미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인호 (2015), p. 79.

49) 日本 外務省, 『外交青書 2016』 (東京: 日經印刷株式會社, 2016), p. 23.

50)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2005년 8월 민관공 동위원회 발표). 조세영,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JPI정책포럼 세미나』 (2015), p. 9.

아니고 일본이 주요 결정권자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 분위기 조성을 요청하는 진지한 자세로 일본이 자국 내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을 설득하여 동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자국 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우익 민족 세력들의 존재와 영향력은 차치하고, 동 문제를 마치 바둑의 '꽃놀이 패'[51]로 활용하듯이 일본 외교의 만능치료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실종하고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로만 쏠려 있다.[52] 이 중 한반도 긴장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일본만이 납치 문제를 꺼내들며 초점을 흐리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강경 일변도를 추구해온 일본은 최근 한반도 주변외교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됨에 따라 '일본패싱' 방지의 버팀목으로 느닷없이 납치 문제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새삼스럽게 꺼내 든 것이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납치 문제의 본질을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납치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만 볼 경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북일 양국의 나름대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 문제 해결과정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이 글에서는 납치 문제와 유사하게 민족주의의 성향이 반영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도 비교함으로써 일본 민족주의 실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에서는 피해자로서 강력히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위안부 문제에서는 가해자로서 문제를

51) 바둑에서 나타나는 패 중, 한쪽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큰 패를 말한다. 세간에서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 이익 또는 손해가 일방적으로 이어질 상황을 표현할 때 쓴다.

52) 姜龍范·王海凡, "전후 일본의 국가 대전략과 북일관계," 『동북아연구』 제31권 제1호 (2016), p. 93.

조급히 무마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납치 문제는 크게 확대시키면서 위안부 문제는 축소 내지는 완전 종결시키고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내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기존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현 상황과, 북한 비핵화 과정을 위한 협상분위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동북아 외교 환경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 문제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아베 총리의 외교력을 과시하면서 동북아 외교에 일본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외교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동 문제는 일본 정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도 북일관계는 물론, 향후 비핵화와 연계되어 한반도 문제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납치 문제 해결에 특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납치 문제가 일본사회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일단 제기하였다. 향후 보다 본격적으로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준섭.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국제평화』 제4권 1호 (2007).
미야모토 사토루. “스톡홀름 합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원주의 모델에서 본 대북정책 결정.”『일본공간』 제19호 (2016).
박명희. “일본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회구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국제관계연구』 제19권 2호 (2014).
박성황. “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일, 북·일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6).
_____. “일본정치에 있어 우익과 민족주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소고: 한국인의 관점을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1호 (2018).
박정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일본공간』 제19호 (2016).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 일본여론의 대북인식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7).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8).
_____.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일본연구논총』 제38호 (2013).
_____. “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 세력.”『일본공간』 제19호 (2016).
이기완. “‘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의 배경.”『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 (2014).
_____.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국제정치연구』 제19집 2호 (2016).
이기태.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 제44호 (2016).
이인호.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동아연구』 제34권 2호, 통권 69집 (2015).
이종국. “일본 아베정권의 대북한 정책: 대화, 압력 그리고 제재.”『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이지영. “일본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5호 (2013).
정영훈 외.『한국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조세영.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JPI정책포럼세미나』 (2015).
姜龍范·王海凡. “전후 일본의 국가 대전략과 북일관계.”『동북아연구』 제31권 1호 (2016).

高崎宗司.『檢證 日朝交涉』(東京: 平凡社新書, 2004).
橋川文三.『ナショナリズム ― その神話と理論』(東京: ちくま學藝文庫, 2015).
拉致問題對策本部.『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東京: 拉致問題對策本部事務局, 2013).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外交に關する世論調査』(東京: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 2013).
北岡伸一. "戰後 日本外交史に殘る成功である."『中央公論』 2002年 11月.
安倍晋三.『美しい國へ』(東京: 文藝春秋, 2006).
安丸良夫.『現代日本思想論 ― 歷史認識とイデオロギ』(東京: 岩波書店, 2012).
鹽川伸明.『民族とネイション ― 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難問』(東京: 岩波新書, 2015).
日本 外務省.『外交靑書 2016』(東京: 日經印刷株式會社, 2016).
田中均.『外交の力』(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9).
田中均·田原總一郎.『國家と外交』(東京: 講談社, 2005).
荒木和博. "屈辱外交に<ノー. コイズミ>を."『月刊諸君』 第36卷7號 (2004).
會田雄次.『日本人の意識構造』(東京: 講談社現代新書, 1972).

『동아일보』, 2014년 11월 8일.
『연합뉴스』, 2005년 3월 9일.
『조선일보』, 2017년 12월 30일.
_____, 2018년 9월 27일.
『讀賣新聞』, 2004년 11월 30일.

http://www.mofa.go.jp/mofaj/area/n-korea/abd/seifukan_0512 (검색일: 2018년 11월 22일).
http://www.bio.uio.no./bot/ascomycets/PCR.trobleshooting.html#anchor654323 (검색일: 2018년 11월 23일).
http://www8.cao.go.jp/survey/index.html (검색일: 2018년 11월 23일).
http://www.rachi.go.jp/jp/shisei/houkoku/index.html (검색일: 2018년 11월 25일).
http://www.rachi.gp.jp/ (검색일: 2018년 11월 25일).

[ABSTRACT]

The Nature of Japanese Nationalism in the Abduction Issue

Seonghwang Park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re are big changes in Northeast Asia's international events after February 2018. Japan is doing the best not to be marginalized as being conscious "Japan passing." South Korea, North Korea, U.S. and China are gathering wisdoms abou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me Minister Abe requested Trump president several times to bring up abduction issue in U.S.-North Korea summit which was held in Singapore. Why Japan and North korea cannot solve this issue?

Although North Korea have had doubtful management in abduction issue, North Korea admitted their mistakes and apologized and promised not to commit similar accidents and have had survivors return to Japan. Therefore, in the future the important agent to resolve issue is Japan. We need to analyze Japan's hidden desire because Japan try to appeal this problem as international issue in spite of the possibility resolving according to Japan's decision-making.

When we regard this issue as single, we can understand Japan's opinion that thorough fact-finding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But the issue couldn't be resolved for 20 year's and so w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by multiple angl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contradiction of issue-resolving process, and assumed the prolonged cause

of this issue as Japanese nationalism's empowerment and the paradigm's conversion of Japanese foreign policy , and tried to ascertain the nature of problem in comparison with comfort women's issue.

Abduction issue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comfort women's issue. and then we can ascertain Japanese nationalism by comparing two issues. This attempt will focus on two points. At first, similities are follows. 1) the issues are occurred between korean peninsula and Japan. 2) human rights were devastated. 3) public power was re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4) thorough fact-finding is not executed. And differences are as follows. war period and peace period, the scale of victims, the degree of public power, the preservation of related data, the alive period of survivors.

Japan government powerfully is suggesting thorough fact-finding for abduction issue as victim but hurried up to minimize and finalize comfort women's issue as attacker. Japan is exaggerating and enlarging abduction issue but try to reduce and conclude comfort women's issue. To this end, this paper try to argue and emphasize intensively that Japan government's dual attitude come from exclusive nationalism.

Keywords: Japanese nationalism, abduction issue, comfort women's issue, paradigm's conversion, Japanese foreign policy

투고일: 2018년 10월 8일, 심사일: 2018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30일